

사라진 사장님들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창업후 폐업까지 평균 6.5년 영업
10명중 4명은 3년도 안돼 문 닫아
빚만 1억 남고 폐업비용 2188만원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창업 후 3년 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였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한 사업체의 창업 이유(복수응답)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순으로 답변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86.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 임대기간 만료나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가 가장 컸다.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도 매출 부진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났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 236만 원이었으며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이 1억 4441만 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 원) 대비 1.5배 이상 높았고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859만 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 원)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복수응답)로 장기대출 상품 전환, 이자 감면 등 채무부담 완화 정책(63.9%), 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경감 정책(51%), 폐업 시 재기 또는 생계 유지를 위한 노란우산 제도 강화(44.4%), 빈 점포 등 상권 슬럼화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30.5%) 등을 꼽았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단체협약 성실이행”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이 최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근로조건 개선과 후생 복지 강화에 중점을 뒀고 특히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장제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교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못한 사항은 향후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제공

불법 사채에 내몰린 서민들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5만건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크게 늘어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들어온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건수가 1만 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1만 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불법사금융 대부, 불법채권추심 등의 관련 피해 신고 비중이 각각 46%와 48.5%로 크게 상승했다. 유사수신 피해신고는 611건으로 전년 보다 29.5% 감소했으나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 등을 빙자한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했으며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 498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또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고금리 대한 등이 필요한 1500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포폰 확인 및 차단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충남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이 19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LNG터미널 2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 지난 1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제공

“당진LNG터미널 사업 타당성 재조사 해야”

충남 환경단체 공익감사 청구하고
가스공사에 2단계 강행 중단 촉구

충남지역 기후·환경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건설하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당진LNG터미널 2단계 건설 사업의 강행 중단과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19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 LNG터미널 건설 사업은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탄소중립 추진으로 국내외 에너지 정책이 급변함에 따라 LNG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변화된 상황에 따른 사업 타당성 재조사 없이 2단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LNG터미널 2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 지난 1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가스공사는 당진 LNG터미널 2단계 건설 강행을 중단하고 사업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탄소중립정책에 부합하는 LNG 수요 전망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가스 인프라 확대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당진은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

지역인데 당초 계획대로 LNG터미널이 모두 건설되면 연관 가스 소비산업이 집중되고 결국 당진은 온실가스 배출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도 “당진은 물론 충남 대부분의 지역에 LNG에 기반한 수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데 화석연료인 LNG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산업이 지역의 올바른 미래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NG터미널 건설과 가스 활용 확대에 따른 문제에 대해 지역 내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당진천 2만 6799km² 수질 집중관리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당진천 유역 2만 6799km²가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당진천 1곳을 신규 지정했으며 지정된 유역은 읍내동, 채

운동, 우도동, 원당동, 수청동, 대덕동, 순성면이다. 당진천은 총인 기준 중권역 목표수질(3등급)이 5년 연속 초과하고 이중 비점오염원 기여율이 50%를 초과했으며 당진천 상류 불투수면 적률이 34.4%로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당진천에 우선 지원되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인공습지 및 저영양개발사업 비점오염 저감사

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을 연내 수립해 2026년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업국장은 “점오염원 관리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관리를 병행·추진해 도내 하천 수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발사체 핵심기술 유출 의혹
대전경찰 항우연 압수수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핵심 기술 유출 의혹으로 대전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우연 본원의 발사체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책임연구원 A 씨와 전 연구원 B 씨가 메시지를 통해 발사체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해 11월 대용량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적발된 후 퇴사해 민간 기업으로 이직했다. A 씨와 B 씨는 주고받은 자료가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준섭 기자 jis@ggilbo.com

코레일, 승차권 미소지 등 KTX 부정승차 40건 적발

코레일이 특별단속을 통해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 부정승차를 40건 적발했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5일간 KTX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1차 특별단속을 통해 승차권미소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15건 등이 적발됐다. 할인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산부가 아님에도 ‘맘편한 코레일’을 부정사용한 A 씨는 약 60만 원, 장애인 아님에도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한 B 씨는 약 55만 원, 타인의 ‘N카드’를 도용한 C 씨에게는 약 54만 원을 부가운임으로 징수하는 등 코레일은 특별단속으로 630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코레일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특

별 단속을 실시하고 출퇴근시간, 주말, 단거리 구간 등 집중적인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중 기자

음식물쓰레기 목표보다 19% 감량

지난해 대전 중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성공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만 2321톤으로 목표치인 2만 7501톤보다 18.8% 줄었다. 목표치 초과 달성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확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 등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구는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